

민주당 경선 입지자 대거 몰려 벌써부터 치열

현 의원 3선 가도에 누가 도전자 되나 관심

해남·완도·진도

해남·완도·진도 선거구는 민주당 공천 경쟁에 나설 입지자들이 대거 몰리며 치열한 당내 경선이 불가피하다. 유재갑 현역 의원이 버티고 있지만 현재까지 민주당 내 경선에 나설 도전자가 수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다. 특히 진도가 고향인 박지원 전 국장원장 출마설이 거론되는 지역 중 한 곳이라 주목해야 할 격전지로 꼽힌다.

재선에 도전하는 유재갑 의원은 부지런히 지역구를 찾다니며 표밭 점검에 한창이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한국 가입에 따라 우려되는 농·수산물 추가 개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주도하거나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단' 활동 등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밀착 행보가 알려진 점 등은 공천 경쟁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중앙정치 무대에서의 미흡한 역할론, 지난 4년 간 별로 두드러지지 않은 지역구 관리 등으로 여론이 좋지 않다고 '교체'의 필요성도 흘러나온다.

은 의원에 맞설 경선 후보에는 이영호 전 의원(17대 국회의원), 정의찬 이재명 민주당 대표 특별보좌관, 윤광국 전 한국감정원 호남본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모두 나름대로의 경력과 고향 발전에 대한 열정 등을 자랑하며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완도 출신으로 20년째 해남에서 해남어촌지도소장을 맡아 생활한 점 등으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 지역인 선호도가 높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 보좌관은 해남 북일 출신으로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 비서관, 광산구 열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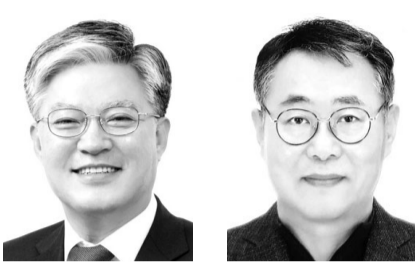


윤재갑

윤광국

이영호

민원실장으로 활동한 경력 등을 활용, 해남에 연구원을 내고 민심을 청취하면서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로 경선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정의찬

조웅

기초단체, 광역단체 행정경험을 통한 소통능력과 추진력이 장점이며 이재명 당대표 특보로 당내 입지 기반이 탄탄한 게 강점으로 꼽힌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14년 해남군수 선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에 뛰어들었다가 고배를 마신 이후에도 꾸준히 경선 경쟁에 나서며 얼굴을 알리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웅 당협위원장이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영암·무안·신안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는 3선을 노리는 서삼석 의원 아성에 누가 도전장을 내느냐가 관심거리다.

서 의원은 민선 3·4·5기 무안군수와 재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쌓아온 의정활동 경험, 농촌 지역구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해결 능력 등으로 지역 내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다. 지난 총선 득표율(76.96%)도 이같은 지역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특히 주민들 사이에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차례가 넘는 쌀값 폭락 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뒷집지고 지켜보는 정치인이 아닌, 농민 대신 소리치고 부딪혀주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도 얻고 있다는 후문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문제점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등으로 지역 내 인지도가 상당하다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전남도당위원장 등을 지내며 다져놓은 탄탄한 조직력으로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 의원 아성에 도전장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로는 백재욱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김병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백 전 행정관은 신안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선임 행정관을 지내고 두 차례 총선에 도전한 바 있다. 백 전 행정관은 지역에 터를 잡고 살며 지역구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장을



서삼석

김병도

백재욱

찾아다니며 주민들과의 스킨십을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무안 출신인 김 부의장도 지역에 상주하며 당원과 주민들을 파고들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선대위 미래기획단 부실장을 맡는가 하면,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이재명 대표와의 인연도 강조하고 있다.

20대 총선부터 무안과 신안에 영암이 포함됐지만 내년 총선에 나설 영암 출신 후보로 나서는 인물이 보이지 않는 점은 향후 민주당 경선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총선에서 영암 출신 후보들이 얼굴을 알렸던 것과 달리, 현재로서는 뚜렷한 후보군이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게 지역 분위기다. 국민의힘에서는 황두남 영암무안신안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검토중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당장 귀국해야”... 민주, ‘佛서 입장 표명’ 송영길에 ‘부글부글’

정부 국가산단에 첨단산업 대폭 허용 포스코 “광양에 4조 4000억원 투자”

“일단 귀국해 결자해지하라”

계파·선수 안 가리고 비판 여론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수세에 처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프랑스에 머무르는 송영길 전 대표의 처신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당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송 전 대표 측에서 벌어진 일로 당이 궁지에 몰렸는데도 정작 본인은 외국에서 이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번 의혹이 최초로 제기된 후 송 전 대표는 지금까지 “잘 모르는 일”이라며 선을 그어왔다. 송 전 대표는 아울러 이재명 대표가 지난 17일

대국민 사과하며 요구한 조기 귀국에 대해서도 “(한국에) 들어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느냐”며 거리를 두는 듯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파리경영대학원(ESCP) 방문 연구교수로 체류 중인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오는 22일(현지 시간)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

이런 태도에 민주당에서는 계파와 선수를 가리지 않고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돈 봉투가 오간 정황을 알았는지, 이번 의혹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과는 별개로 일단 귀국해 물의를 일으킨 것을 사과하고 진상 규명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당 대표가 조기 귀국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는데도 귀국을 미루며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직 대표로서,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밝혔다.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역시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성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를 향한 당내 여론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의원들의 전언이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일단 귀국해 결자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에 욕두 문자까지 섞이면서 불만을 표하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총리, 광양제철소 방문

“상반기 규제완화 개정 입법예고”

정부는 19일 특정 업종으로 시설 입지가 제한된 특정 산업 국가 산업단지(국가 산단)의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투자하거나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입지 기준을 대폭 풀어주겠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광양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방문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 지역에 신성장산업 투자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현행 제도하에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행하겠다”며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포함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상반기 입법예고를 완료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령에 따르면 특정 산업 산단에는 당초 계획이 수립될 때 허가받은 특정 산업과 ‘연관 산업’만 들어설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특정 산업 산단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있을 때 연관 산업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 분야의 신성장산업 육성이

나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허용 범위를 넓히도록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포스코는 이 같은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광양 국가 산단 내 동호안에 국가전략산업을 중심으로 2033년까지 10년간 최소 4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제철소 동쪽 바다에 있는 동호안은 포스코가 바다로 인한 제철소 부지 침식을 막기 위해 만든 매립지다. 포스코는 1989년부터 제철소와 동호안 사이의 바다를 추가로 매립해 오고 있다.

포스코는 동호안에서 2차전지 소재와 수소 생산, 황산니켈 정제 등 신성장 산업 부문 사업 진행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정부 지원으로 철강과 국가 첨단산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한 메가 미래형 산업단지 동호안을 탈바꿈할 발판을 마련했다”며 “국내 취업 유발 효과는 매년 약 9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총리는 “이번 결정은 국가 첨단산업의 선제적인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규모 민간 투자가 지역경제 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역투자 현안을 현장에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 분야의 신성장산업 육성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공매입·우선매수 검토

“당정협의 열어 예산투입 논의”

국민의힘이 전세 사기 대책으로 피해 주택을 공공 매입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19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전세 사기 대책은 당과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공 매입과 우선매수권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예산이 들어갈 수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 매입의 경우 2억원 아파트인데 1억원 전세금이 들어있다면 피해자가 몇천만원 정도를 내고 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메워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같지, 아예 지원할지는 더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 매입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주택 대금을 일부 지원해 매입하는 방법이다.

우선매수권 부여는 피해 주택에 대해 진행 중인

경매를 중단하고, 정부나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우선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식이다.

공공 매입과 우선매수권 부여 모두 ‘전세 사기·강동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피해자 모임이 요구해온 조치다.

정부는 전날 전세 사기 피해 입자의 거주권 확보를 위해 해당 주택 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경매 연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으나, 공공 매입이나 우선매수권은 언급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20일께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당내 ‘전세 사기 대책 태스크포스(TF)’도 꾸리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행복한농호, 함께하는 KRC

광주일보 71

4대호(장성호, 나주호, 담양호, 광주호)의 첫 통수일정은 5월 23일입니다.

KRF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지역본부